관세 전쟁에 흔들리는 수출 中企… '정부지원·다변화 절실'

중기부, 현장 점검회의 대응책 모색
기업들 "물류·자금 지원 등 시급"
10곳 중 6곳 "상호관세 수출 타격"
수출계약 지연·취소 피해 현실화
노 차관 "해외진출 법제화 추진"

#한국은 HS코드가 6자리다. 그런데 미국은 8자리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에 직접 진출시 투자비, 인건비 등 총비용과 한국에서 수출시 늘어나는 관세부담 수준을 기업 스스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전략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제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많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 미국 대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나가는 것은 또다른 비용 부담이 따른다. 정부가 지원해 달라.

#어느 쪽이 관세를 부담할지, 수출 자금을 댈지 등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면 협상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중순 미국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 계약 감소·지연·취소'(40.7%) 등 실제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수출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지원방안에는▲수출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자본 200억 또는 자산 700억→자본 300억 또는 자산 1000억원) 추진 ▲수출 다변화 특 노용석 차관은 "지난번 유럽의 화장품 규제 중 (업계가 제기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해 EU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면담시 해당 내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선 기업들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스템 임영진 대표는 "늘어나는 관세만큼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업도 돈이 많으면 뭐가 걱정이겠냐"며 "우리는 수출이 전체의 30% 정도다. 거래기업의 생산기지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관세 문제가 불거져서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가서 (생산)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 목소리를 전했다.

노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패션, 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 다양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重, 세계 첫 원자력 LNG선 시대 열다

MSR 추진 LNG선 인증 확보
액화수소 운반선·풍력선 성과
스냅 윈드 플로트 인증 추진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 추진 LNG 운반선의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선박용 소형원자로 실현을 향한 첫 걸음이자, 조선·에너지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흐름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날 개막한 이탈리아 밀라노 '가스텍(Gastech) 2025'에서 미국 선급(ABS)과 라이베리아 기국(旗國)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MSR 추진 LNG운반선' 기본승인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선박 설계가 국제 규정과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절차로 실제 건조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 단계다.

특히 원자력선 관련 풍부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 선급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아 탄소중립 전환 요구와 맞물려 그 의미가 높다.

이번 LNG 운반선은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원으로 삼는다. 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함께 섞은 용융염을 액체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LNG 운반선은 초저온 화물을 실는 특성상 고온 원자로와 열적 균형을 이루는 데 적합하고 일반 상선과 달리 인구 밀집 항만에 자주 입항하지 않아 핵추진 적용의 현실성이 크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념 설계 중인 LNG 운반선은 17만4000㎥급으로 100MWth 용량의 MSR 1기를 탑재하면 폐선 시까지 연료 교체가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선박 엔진 대비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과 원자력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23년부터 해양용 MSR 원천·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이날 노르웨이 선급(DNV)으로부터 선체 크기를 최적화하고 단열 성능을 개선한 '8만㎥급 액화수소 운반선' 인증을, 오는 10일에는 영국 선급(LR)에서 '풍력보조추진장치 탑재 LNG운반선'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이어 9일과 10일 양일간 글로벌 5개 선급이 15메가와트(MW)급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스냅 윈드 플로트'를 인증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한전선, 수주잔고 3조 돌파… 역대 최고치

AI 시대, 해저·초고압 전력망 주문↑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가 3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반그룹에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말보다 3.5배 급증한 규모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초고압 전력망 주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8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3조25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455억원에서 3.5배 증가한 수치로 이 기간 수주 잔고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30%를 상회한다.

수주 잔고는 구리선을 가공하는 소재 사업, 통신케이블 사업, 국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제외된 물량이다. 수익성이 높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수주 사업만 추린 액수로, 초고압 전력망이 대부분이다.

대한전선은 올해 8월 한 달에만 ▲안마해상풍력 해저케이블 프로젝트(1816억원) ▲싱가포르 400킬로볼트(㎸)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1100억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총 2200억원) 등 총 51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수주 확대의 배경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쌓아온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턴키 역량을 꼽았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현지에서 최근 진행된 400㎸ 턴키 프로젝트를 5회 연속 수주하며 400㎸급 이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중기부 등 10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맞손

'데이터 실무협의체'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그리고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부 산하 코레일,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관으로의 도약과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꾸렸다.

상호 협력은 ▲임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및 행사 등 데이터 문화조성 ▲대국민 의견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과 양질의 데이터 개방 모색 ▲데이터 시각화 및 AI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실무자 교류를 통한 데이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승호 기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인증 받는다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21년 3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됐다.

/김승호 기자